

이덕일의 '역사의 창'



국립중앙박물관의 실수?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이 상설전시실 중국관에서 조조(曹操)의 위(魏)나라가 충청도까지 지배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전시했다가 '실수'라고 사과했다. 배현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 민병찬 관장은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가 빠아픈 실수가 됐다"고 시인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사학계에 만연한 식민사관을 비판해 온 사람들은 이런 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동북아역사재단은 2015년까지 약 8년간 국고 47억여 원을 들여 이른바 '동북아역사지도'를 제작했다. 한국 대학의 역사학과를 장악하고 있는 이른바 강단사학계의 역사가들이 고스란히 드러난 이 지도의 위·축·오(魏·蜀·吳:221-265) 도엽에도 조조의 위나라가 경기·강원도까지 차지했다고 그렸다.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발행한 '중국역사지도집'의 위나라 도엽을 거의 그대로 베낀 것이다.

손권의 오나라 및 유비의 촉나라에 맞서 일진일퇴하던 위나라가 무슨 여력이 있어서 동쪽으로 기수를 돌려 만여 리 남의 만주 땅을 모두 차지하는 것도 부족해서 평안도·황해도도 물론 경기·강원·충청도까지 지배할 수 있었을까. 유지원생도 품을 만한 이러한 의문을 이 땅의 역사학자들은 전혀 품지 않는다. 반성도 없다.

'동북아역사지도'는 중국 동북공정과 일본의 황국사관을 추종했고, 특히 독도를 끝까지 누락시켰다는 비

판 끝에 폐기되었다. 하지만 2018년 문재인 정권에서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김도형 연세대 교수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도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비장하게 선언했었다. 이에 '동북아역사재단 해체 범시민연대'가 결성되어 재단 앞에서 "매국사학의 소굴 동북아역사재단은 당장 자폭하라"는 등의 피켓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에 주춤하는 했지만 이 지도에 담은 내용은 이 나라 강단 역사학자들의 DNA에 그대로 남아 있다가 결국 중앙박물관의 영상으로 다시 나타난 것이다.

중앙박물관은 2019년 12월 '가야본성'(加耶本姓)이라는 가야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 설명 중에 '366년 왜가 백제와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 설명의 출처는 일본 황국사관의 성서인 '일본서기' 신공(神功)황후 46년조이다. '일본서기'는 야마토왜의 신공황후가 재위 46년 시마노스쿠네(斯摩彥)를 탁순국(倭國)에 사신으로 보냈다고 말한다. 탁순국왕은 이 사신에게 2년 전에 백제왕이 구저(久氏) 등을 보내서 "일본 귀국(歸國)에 조공을 바치고 싶지만 가는 길을 몰라서 바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주었다.

'일본서기'는 시마노스쿠네가 자신의 종 니하야(爾波移)와 탁순 사람인 과고(過古)를 "백제국에 보내 그 왕을 위로했다"고 전한다. 백제 초고왕(尙古王)은 니하야 등을 크게 환대하면서 각종 선물을 주고는 나라의

보물창고를 열어 "우리나라에는 진귀한 보물이 많은데 귀국에 조공을 바치려고 해도 길을 몰라서 바치지 못했다"면서 "지금 사신에게 부탁해서 공물을 바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신공 46년은 서기 246년인데, 한국 재침략을 꿈꾸는 일본 극우파 역사학자들은 제멋대로 120년을 끌어올려서 근초고왕 21년인 366년의 일이라고 우긴다. 재위 26년(371)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백제 근초고왕이 중앙박물관의 눈에는 야마토 왜의 사신이 보낸 종 니하야에게 조공품을 대신 전해달라고 비는 비천한 존재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 중앙박물관의 눈에는 '366년 왜가 백제와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맺은' 사건으로 보인다는 것이니 논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역사학 현실이다.

광복과 동시에 폐기되었어야 할 황국사관은 이병도·신석호 두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역사학계를 거의 100% 장악해서 총독부 역관을 하나뿐인 정설·통설로 만들었고, 현재까지도 한국의 역사학계를 거의 전부 장악하고 있다. 이 분야는 보수·진보도 없이 식민사학 한 통속이다. 이 두 인물을 흔히 국사학계의 태두(泰斗)라고 칭하는데, 이 '국'(國)자가 대일본제 '국'(國)인지 대한민 '국'(國)인지를 묻는 것은 작금의 현실에서 전혀 과한 질문이 아니다.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의료칼럼

돌발성 난청



신동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비인후과 과장

가수 노사연이 최근 채널A '레전드 음악교실 - 플라랜드'를 통해 "2015년 찾아온 '돌발성 난청'으로 현재는 귀가 거의 안 들리며 보청기를 끼고 노래하는 만큼 무대에서의 시간이 소중하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난청'이 노년층만의 질환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청소년과 젊은 직장인들도 과도한 스트레스와 이어폰 등 음향기기 사용으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시적인 증상으로 가볍게 생각하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청력을 상실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 바로 '돌발성 난청'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돌발성 난청 환자 수는 2016년 7만 5937명에서 2020년에는 24% 가량 늘

어난 9만 433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특히 2020년 환자 가운데 50.8%(4만 7983명)가 30~50대 환자로 나타나 비교적 젊은 연령대 환자 비중이 높아지며 선제적 예방과 빠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돌발성 난청은 사흘 이내 세 개 이상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30dB 이상 청력 저하 현상이 갑자기 발생하는 질환이다. 사람마다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데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등을 겪은 후 발생한 사례가 많다. 감기를 앓고 나서 바이러스로 발병할 수 있고, 빈도는 낮고 드문 경우지만 중추성 질환인 '청신경 종양'으로 생길 수도 있다.

돌발성 난청은 전 세계적으로 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0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유병률은 이 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치료 시기가 빠를수록 회복률이 높으므로 귀 먹먹함, 청력 저하, 이명 증상 등 귀에 이상이 생기면 신속하게 병원을 찾게 중요하다.

갑자기 발생한 청력 저하가 주된 증상이고 양쪽 귀보다는 한 쪽 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명 및 귀 먹먹함, 어지럼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진단은 고막 내시경으로 고막천공, 중이염 여부를 확인하고 귀지 막힘이 있는지를 감별한다. 순음, 어음

청력 검사로 청력 저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어지럼증 검사와 정밀 청력 검사인 '뇌간 반응 검사', 청신경 종양 감별을 위해 '측두골 MRI검사'를 추가로 시행한다.

치료는 전신 스테로이드 요법이 기본으로 주사 및 약물 치료를 시행한다. 스테로이드 치료는 총 2주간 진행된다. 1주일은 고용량 사용, 나머지 1주일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점차 줄여 투여한다. 증상에 따라 어지럼증 증상 조절약, 혈관 확장제, 이노제, 혈액순환 개선제, 항바이러스제 등을 처방하기도 한다.

또 다른 치료법으로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이 있는데 전신 스테로이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스테로이드를 고막 안쪽에 주입하는 방법이다. 돌발성 난청 환자 중 전신질환으로 전신 스테로이드 요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고, 전신 스테로이드 요법과 병행 치료할 수도 있다.

난청을 예방하려면 큰 소음과 압력을 피해야 하며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이용할 때는 낮은 음량으로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를 음향기기 사용 후 1시간 당 10~15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고 혈액순환에 악영향을 주는 술이나 담배, 짠 음식은 가급적 삼가야 한다.

기고

신안 해상풍력단지의 과제



이현진 경영학 박사·전 목포시청 국장

'탄소 제로'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이른바 수소 자동차, 하이브리드 항공기, 전기 선박 같은 환경 관련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기후변화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세계 경제 흐름이 저탄소 구조로 바뀌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에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이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을 주도할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신안군 임자면에 8.2GW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되고, 대양산단과 목포신항, 남항 일원이 국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되어 친환경 선박과 풍력 터빈, 타워 등 대형 기자재를 제작·조립하기 위한 배후 부지로 활용된다.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과 국가 간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기능을 우리 지역에서 선점하게 됐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해상풍력은 녹색에너지를 비롯한

관련 산업에의 파급 효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총 48조 원이 투입될 조성 공사 자체도 대단하지만, 공사가 끝나는 2030년부터 12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얻게 될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 또한 엄청난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의 지리적 이점과 그동안 축적해온 잠재 역량을 극대화한 상징적인 사업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고, 제조업을 비롯한 서비스 산업, 고용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상풍력산업은 이를 타개할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국비 예산 확보, 외국 자본 투자 유치, 상생 일자리 마련, 배후 지원과 연관 산업 육성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

대규모 풍력단지를 운영할 인력 확보 문제도 중요하다. '그린 뉴딜'의 거점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규모뿐만 아니라 질적인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플랫폼을 선도할 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 자치단체, 목포대, 한전공대, 녹색에너지연구원 등 산·학·관·연을 하나로 묶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풍력단지

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배출된 고급 인

력의 뒷받침이 없다면 여기서 파생되는 이익을 우리 것으로 수용할 수 없음을 생각할 때, 인력 확보 여부는 바로 해상풍력의 성공 여부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사업 추진에 따른 파급 효과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산업 클러스터 관점에서 기술 인력의 우리 지역 정착을 위한 포괄적인 정주여건 마련과 작업 환경,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의 유인책도 병행하여 준비해야 한다.

고급 인력 확보는 단순한 해상풍력단지 운영 측면을 떠나 이에 따라 촉진될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전기 자동차, 친환경 선박 제조 같은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성숙된 지식과 숙련된 노하우 집적을 통한 산업 구조의 업그레이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자칫 잘못되면 사업장은 우리 지역에 있지만 고용과 파생 이익은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같은 좋은 기회를 효과적으로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전라남도와 목포시, 신안군이 경제 공동체를 구축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해상풍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열린 자세로 함께 고민하면서 힘겹게 일귀내 미래 먹거리가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社說

초광역 경제발전 호남권만 왜 불협화음인가

광주·전남·전북이 추진하는 초광역 경제발전 프로젝트가 한목소리를 내도 부족할 판에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정부가 지방인구 감소, 지역경제 낙후 등을 개선하기 위해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호남권만 독자노선을 고집하며 시너지 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따르면 오는 14일 열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지역의 초광역 경제발전 프로젝트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부산·울산·경남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충청도는 '충청권 메가시티',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청사진을 발표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하는 'RE300' 등이 제안됐던 광주·전남·전북은 호남을 아우르는 초광역 경제발전 프로젝트를 내놓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이 광주·전남과의 연대 대신 강원도와 함께 특별자치단체 형태의 프로젝트를 모

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광주와 전남도 역시 각각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짜고 있다.

이에 비해 경남 지역은 지난 7월 발표한 제4차국가철도망 계획에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창원-김해-양산-울산을 잇는 부울경 순환철도를 반영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해양쓰레기 처리와 수소선박 개발 실증 사업 등 부울경 초광역협력 신규 사업에 76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정부의 메가시티 프로젝트는 나주 혁신도시에 이은 '지역발전시존 2'로, 수도권 집중화에 맞설 지방 발전을 위한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전남의 풍부한 자연을 바탕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를 광주와 전북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새로운 산업 구도를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따라서 호남권의 초광역 경제발전 프로젝트가 실현되기 위해선 3개 시도가 상생 정신을 발휘해 하루빨리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과 비전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원전 하청직원 방사선 피폭 줄일 대책 마련을

원자력발전소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직원들의 방사선 피폭량이 정규직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격차는 국내 네 곳의 원전 가운데 한빛원전이 가장 컸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자력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 1인당 방사선 피폭량은 0.48mSv(밀리시버트)였다. 이는 정직원 1인당 피폭량 0.07mSv보다 7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특히 한빛원전은 협력업체 직원 1인당 피폭량이 정직원의 9.02배로 국내 원전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울은 7.97배, 고리·새울은 7.67배, 월성은 4.18배였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피폭량이 원전 노동자의 1인당 연간 허용치인 50mSv를 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월성원전에서 543일간 근무한 협력업체 직원 A씨는 2015년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다른 협력

업체 직원 B씨는 2013년 혈액암 판정을 받았다. 이들의 피폭량은 각각 42.88, 25mSv로 연간 허용치보다 낮았다.

해당 자료를 분석한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의 피폭량 차이가 큰 원인으로 핵연료봉 및 원자로 등이 있어 방사선 수치가 높은 관리구역 출입 인력이 대부분 협력업체 직원임을 꼽았다. 원전 내 산업안전사고 역시 협력업체에 집중되고 있다. 5년간 숨지거나 다친 협력사 직원은 153명으로 한수원 직원에 비해 9배 이상 많았다.

이를 통째로 원전 내에서 피폭 등 위험이 큰 업무를 주로 협력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문제는 위험 업무를 외주화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수원은 방사선 노출 위험이 큰 원전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추적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요즘 광주에서 올라가고 있는 건물은 모두 아파트다. 천편일률적으로 높고 네모반듯한 디자인이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건 지역 브랜드건, 아파트 외관은 비슷비슷하다. 건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더라도 늘어만 가는 잿빛 건물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문화도시라는 광주에 반문화적인 건물만 가득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경관은 모두의 자산이다. 유럽의 도시는 구도심 건축물을 유지·개선할 수 있을 뿐 건물주 마음대로 외관 디자인을 바꿀 수는 없다. 미국 뉴욕에

북동의 선택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를 받아 외관을 정비하는 정도만 할 수 있다. 건축물 하나하나가 도로·공원 등과 어울려 도시 전반의 모습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개개 건축물의 디자인 역시 중시하는 것이다.

광주는 어떠한가. 오래된 건축물이든 역사적인 공간이든 그저 밀어 버린다. 디자인이라 말하기도 어려운 정도의 아파트들만 죽죽 늘어난다. 어느새 시내 어디에서도 무등산을 볼 수가 없게 됐다. 도로 어디를 달려도 아파트의 꼭대기와 벽면만 보인다. 이유는 간단하다. 건설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시스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명 브랜드 건설업체들도 광주에서만 그쳐 수익을 최대한 뽑아내는 것에 혈안이 된다. 디자인에 대한 투자는 없고 찍어낸 듯한 판박이 아파트만 짓고 있는 것이다. 주변과의 조화나 공존, 아름다운 디자인, 입주민 및 인근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은 안중에도 없다.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최근 광주시가 구성한 경관위원회가 이제까지와는 달리 중요한 결정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 북

구 북동 일대를 모두 철거하고 39층 24개동 2800여 가구 규모 아파트

트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에 대해 처음으로 반례 조치를 취한 것이다. 북동 원주민들이 같은 고층 개발을 반대하고, 시민단체 등도 여기에 가세하자 광주시 경관위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며, 명확한 미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광주시 경관위는 각종 개발 계획에 대해 사업성이 아니라 광주 경관에 보탬이 되는 것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경관은 도시 정체성 그 자체가 때문이다. /윤현성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